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KISO포럼 공동세미나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주의 :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

| 일 시 | 2018년 3월 29일(목) 오후 2시30분 ~ 4시30분

|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공동주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PROGRAM |

개회식

발제 및 토론

사회: **조화순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장)

주제발표 1 온라인 여론공간 양극화의 심리적 원인과 대응

■ 발표자: **나은영**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주제발표 2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이론과 실제

■ 발표자: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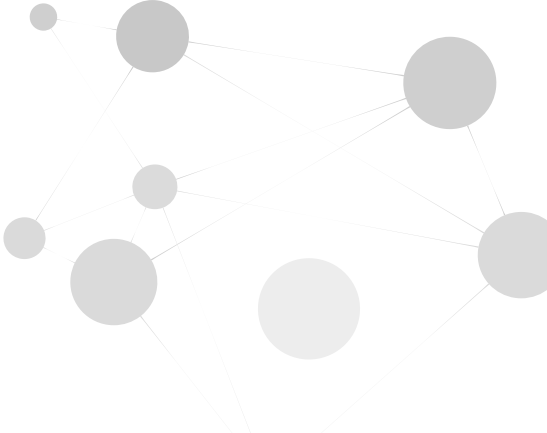
■ 토론자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일권**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 CONTENTS |

주제발표 1 온라인 여론공간 양극화의 심리적 원인과 대응 | 03 |

■ 발표자 : **나은영**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주제발표 2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이론과 실제 | 23 |

■ 발표자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종합토론


■ 토론자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일권**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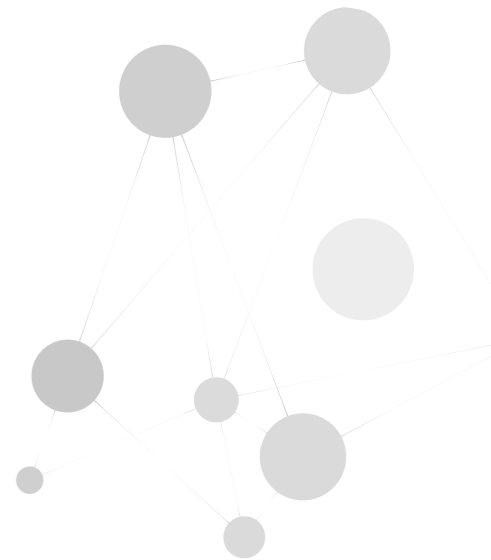
-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제발표 1

온라인 여론공간 양극화의 심리적 원인과 대응

나은영 (서강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여론공간 양극화의 심리적 원인과 대응

나은영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KISO 포럼 (2018. 3. 29.)

SOGANG UNIVERSITY

발표 순서

- 1 의견 양극화의 현황
- 2 의견 양극화의 심리적 원인
- 3 의견 양극화를 줄이려면?

SOGANG UNIVERSITY

1. 의견 양극화의 현황

반복적 노출과 종료 욕구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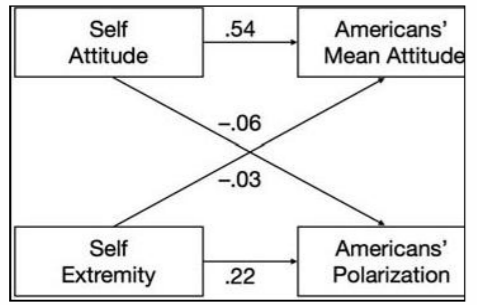
- **반복적 노출이 의견 극화의 한 원인** Brauer et al. (1995)
 - 토론 중 어떤 의견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그 방향으로 태도 극화
- **종료 욕구가 강하면 신뢰 판단이 극화됨** Acar-Burkay et al. (2014)
 - 빨리 끝내고 싶을 때는 가까운 사람은 신뢰, 먼 사람은 불신
 - 나중에 신뢰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받아도 생각을 바꾸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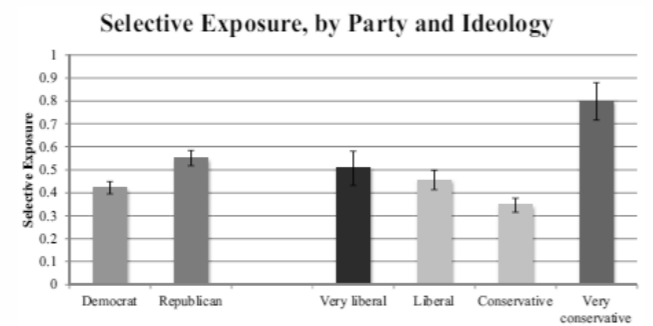
인터넷 또는 SNS와 같은 미디어 이용시
반복적 노출과 종료 욕구 강한 경우가 많아
극화의 우려 증가

극단화와 선택적 노출

- **자신의 태도가 극단적일수록 극화 지각**
 - 타인 의견을 극화시켜 지각할수록 투표 의도가 높아짐
- **정당 정체성의 강할수록 선택적 노출이 많음**



Van Boven et al. (2012)



Rodriguez et al. (2017)

미디어 이용과 의견 극화

출처: 박상운 (2014)

- **의견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더 극화됨**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49	2.1633	1.31255
기타	1064	1.7575	1.35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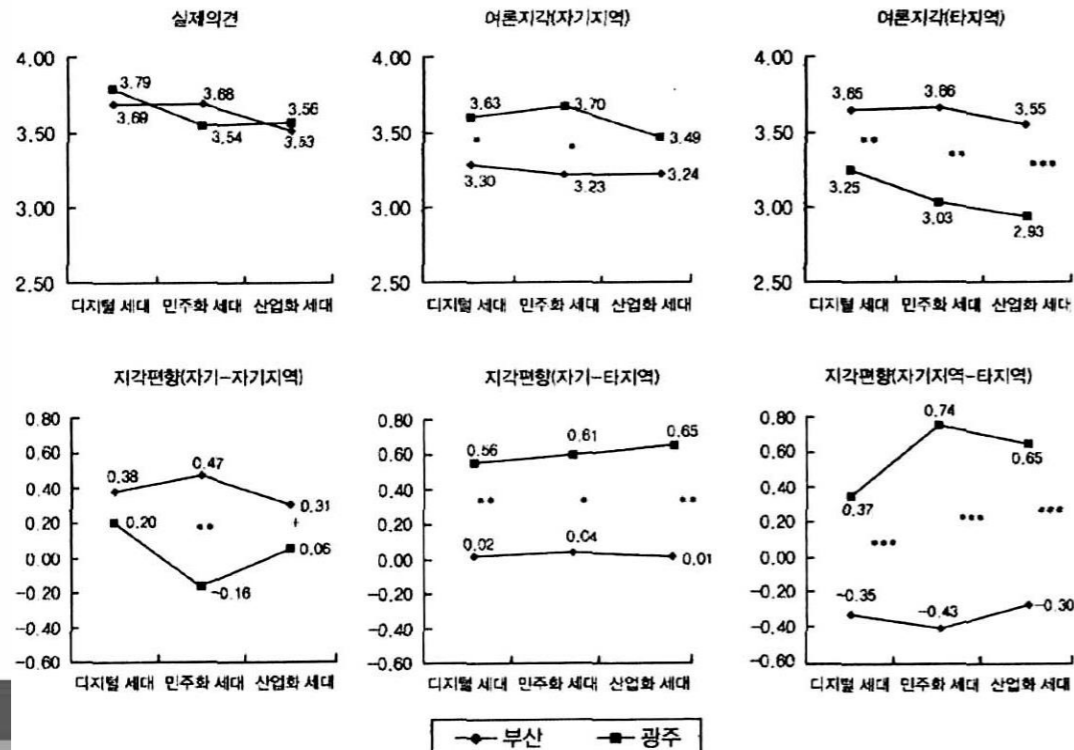
t = 2.11, p < .05

- **매체 이용도와 의견 극화의 관계**
 - 동영상 > SNS > 인터넷 > 종이신문, 라디오, TV

의견극화	종이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동영상 (유튜브 등)
Pearson 상관계수	.041	-.017	.013	.062*	.089**	.137**

전국 이슈에 대한 여론지각과 지각편향

출처: 박선희 · 한혜경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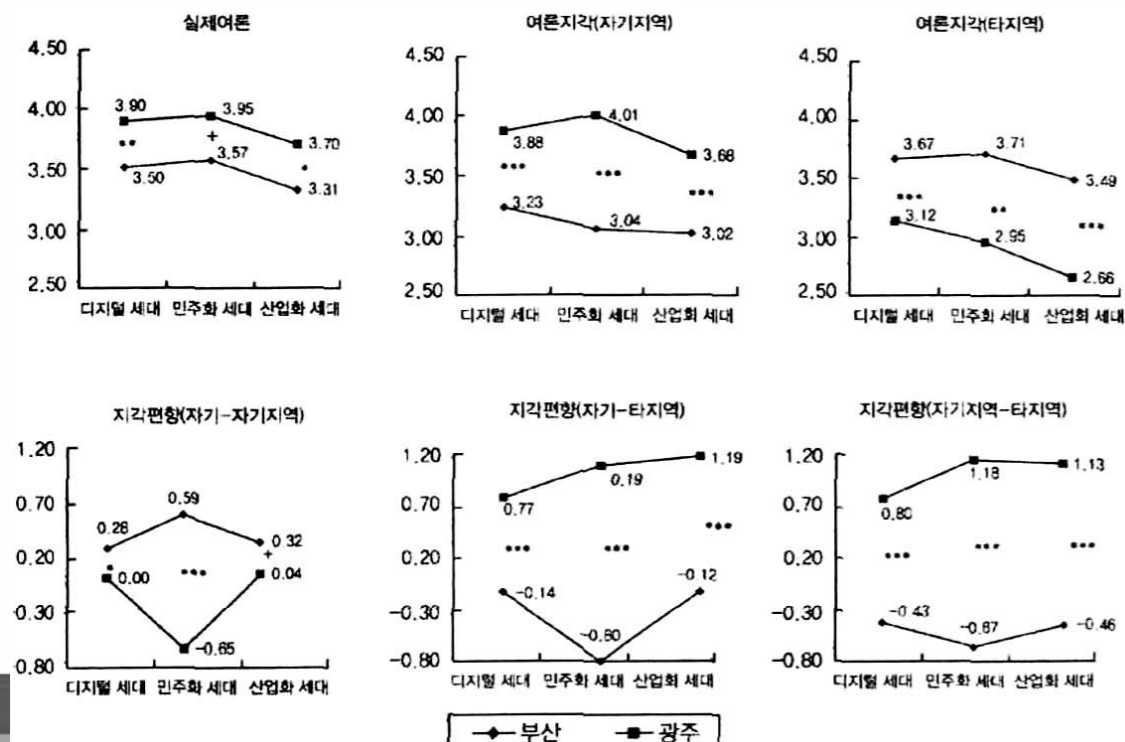
7

2. 의견 양극화의 심리적 원인

SOGANG UNIVERSITY

지역 이슈에 대한 여론지각과 지각편향

출처: 박선희 · 한혜경 (2007)



8

왜 극단화가 일어나는가

- 설득주장 이론** (Burnstein & Vinokur, 1977)
 -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그 의견을 지지하는 다른 근거들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되므로
- 사회비교 이론** (Levinger & Schneider, 1969)
 - 자기 집단의 의견에 해당하는 내용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리더처럼 보이므로
- 사회정체감 이론** (Tajfel & Turner, 1986)
 - 상대 집단과의 차별성을 더 뚜렷하게 부각시켜야 자기 집단의 존재 이유가 생기므로

막말?

10

SOGANG UNIVERSITY

인터넷에서 극단화 심해지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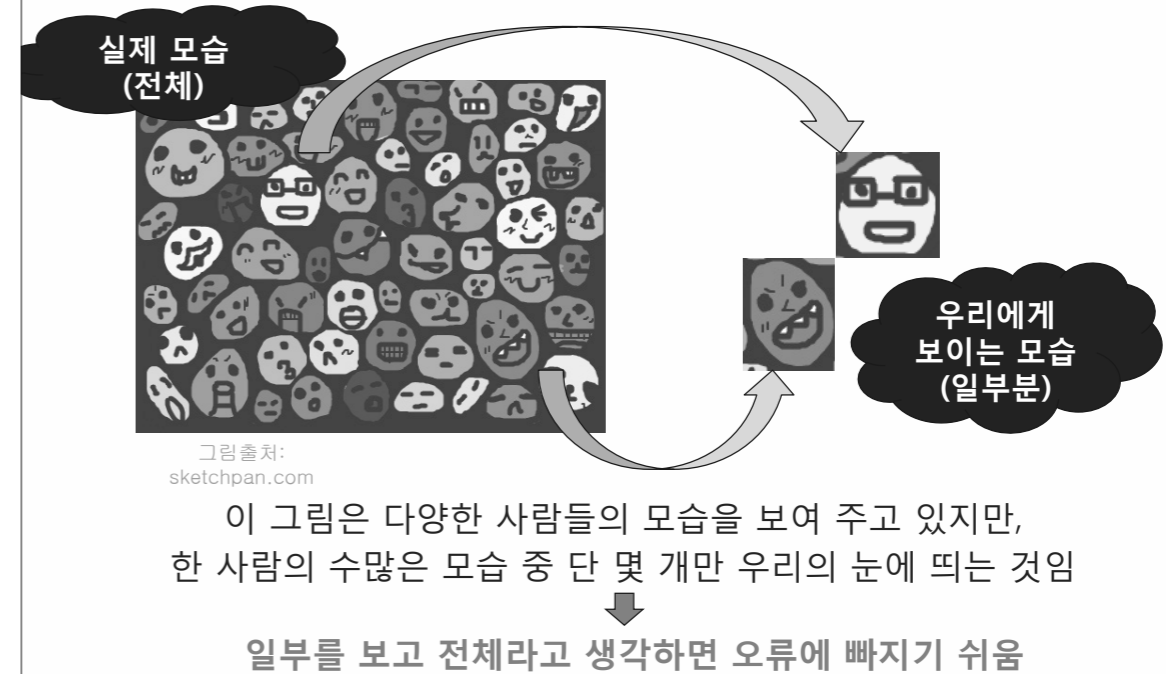
- 선택성:
 - 인터넷이 다양한 의견에 열려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의견만 과도하게 접함.
- 익명성:
 - 가면을 쓰고 있음으로써 느끼는 자유.
- 정서성:
 - 이성적 논의 < 감성적 성토, 숙고 후 발언 < 순간적 내뱉음.
 - 쉽게 분노하는 성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음.

분노 자체가 행동의 '에너지'는 될 수 있으나, 행동의 바람직한 방향성과는 무관함.

11

SOGA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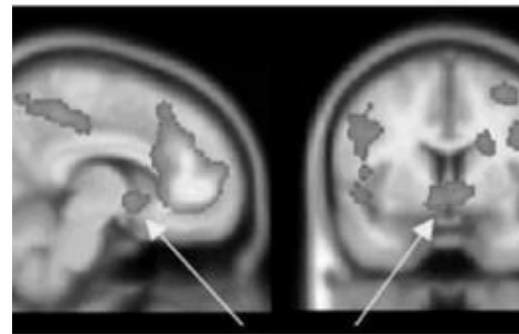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13

SOGANG UNIVERSITY

자기 이야기 하며 보상 느끼는 뇌



하버드대 신경과학자
Diana Tamir & Jason Mitchel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The Wall Street Journal
(May 8, 2012)

음식이나 돈과 같은 보상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와 같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기보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우선함

12

SOGANG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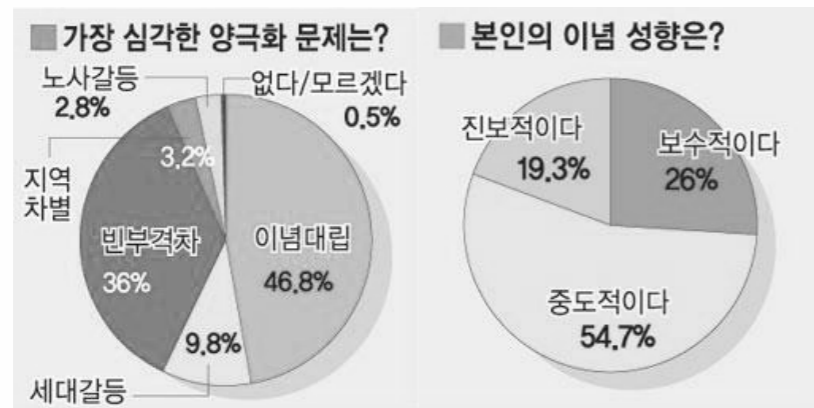
타인 의견의 오지각과 양극화

- 서로가 자기 편이 다수라고 생각 (합의착각)
 - 자기 편의 의견이 다수처럼 보이도록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음 (특히 SNS에서)
-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스스로 '중도'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약 50% 정도이며, '진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과 '보수'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약 25% 정도씩으로 나뉨
 - 중도성향자들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지 않고, 양 극단 성향자들이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부딪침.

14

SOGANG UNIVERSITY

설문조사의 사례



• 기독교인들 대상 설문 결과:

국민일보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 옥한흠 목사)가 2011년 전국 기독교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http://ask.nate.com/qna/view.html?n=11002191>

다원적 무지 (2)

당선가능성에는 타인의 의견에 대한 잘못된 지각이 포함되어 있음

지지율 盧 43.5 李 37%
당선가능성 李 58.2 盧 28%

KBS 여론조사
공식 대선선거전에 돌입하기 직전인 25. 26일 실시된 방송3사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원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에 6.3~7.1%포인트 앞선 지지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공개되는 지지율 수치로는 마지막이다. KBS와 한국갤럽이 25일 전국 1947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노 후보가 43.5%의 지지율을 보여 37.0%에 그친 이 후보보다 6.5%포인트 높았다. MBC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25일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에서도 노 후보는 42.1%를 얻어 이 후보(35.8%)보다 6.3%포인트 앞섰다. SBS와 TNS가 전국 1000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5. 2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 후보 45.7%, 이 후보 38.6%로 나타나 노 후보가 7.1%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에서는 여전히 이 후보가 노 후보를 2배 이상 앞섰다. KBS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이 후보가 58.2%, 노 후보가 28.0%로 나타났고, SBS 조사에서는 이 후보 61.0%, 노 후보 27.1%였다. **원종구기자 kmas@donga.com**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잘못 지각될 가능성은 항상 있음
- 특별히 편견이 많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저지르기 쉬운 오류

다원적 무지 (1)

출처: O'Gorman (1975)

본인이 흑백분리정책 찬성하는 비율보다 대부분의 백인들이 찬성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WHITES IN FAVOR OF RACIAL SEGREGATION AND WHITES WHO BELIEVE A MAJORITY OF WHITES FAVOR RACIAL SEGREGATION, BY REGION, 1968

Region ^a	(N)	Favors Segregation (1)	Believes Most Favor Segregation (2)	Ratio of (2) to (1)
New England	(58)	7%	19%	2.7
Middle Atlantic	(216)	13	46	3.5
East North Central	(207)	14	48	3.4
West North Central	(160)	16	40	2.5
South	(269)	32	61	1.9
Border South	(95)	25	48	1.9
Mountain States	(38)	18	51	2.8
Pacific Coast	(147)	9	42	4.7
All Regions	(1,190)	18	47	2.6
Don't Know and No Answer	(218)			
Total White Sample	(1,408)			

과대 추론

케네디 대통령과 집단사고

출처: Janis (1972)



사진 출처: jfklibrary.org

- 응집력 높고 만장일치 압력이 있는, 자신감에 차 있는 집단 - 외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 합리적 사고가 가능해짐.

신문 타이틀의 영향: 언론 역할 중요

출처: Price (1989)

집단 갈등을 자극하는 제목과 내용이 집단양극화 유발

Humanities, Science Majors at Odds over Core Program

Task Force Probes Student Views on Core Curriculum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이 내집단 의견을 실제보다 더 극화시켜 지각

극화시켜 잘못 지각한 내집단 의견에 동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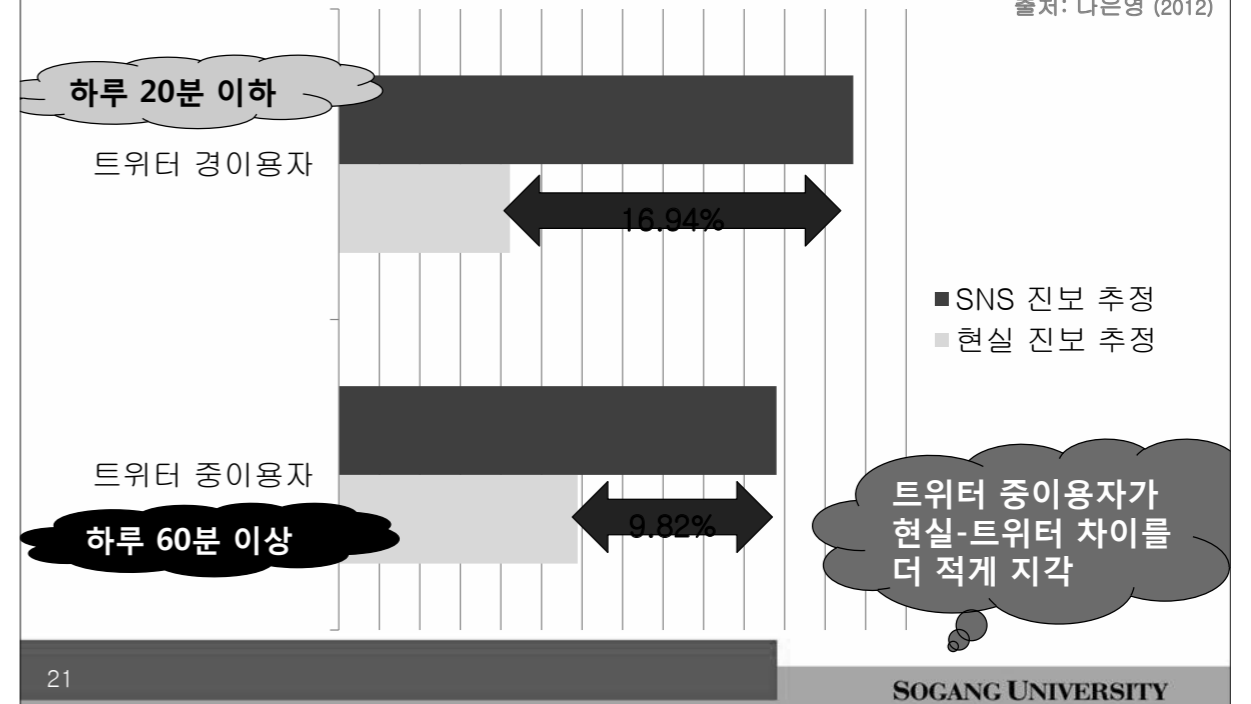
인문계, 자연계 학생들 의견 양극화

의견 양극화 발생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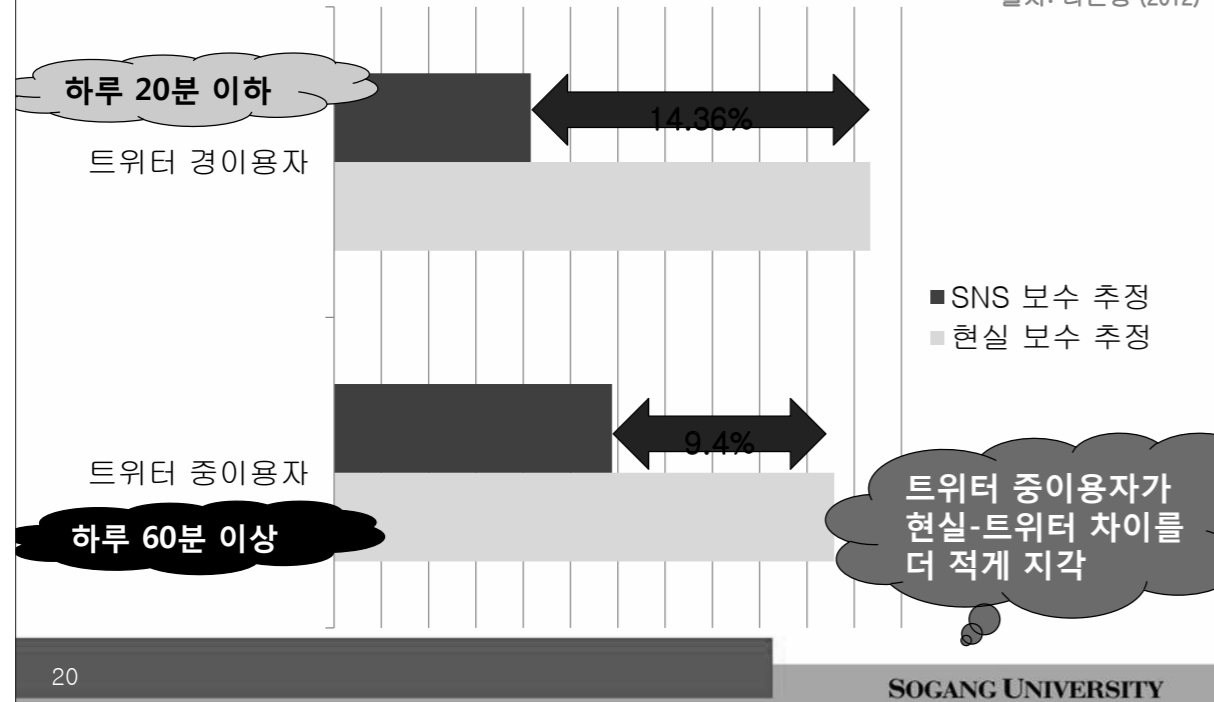
트위터 종이용자가 경이용자보다 현실-SNS 진보 비율 추정 차이 더 적음

출처: 나은영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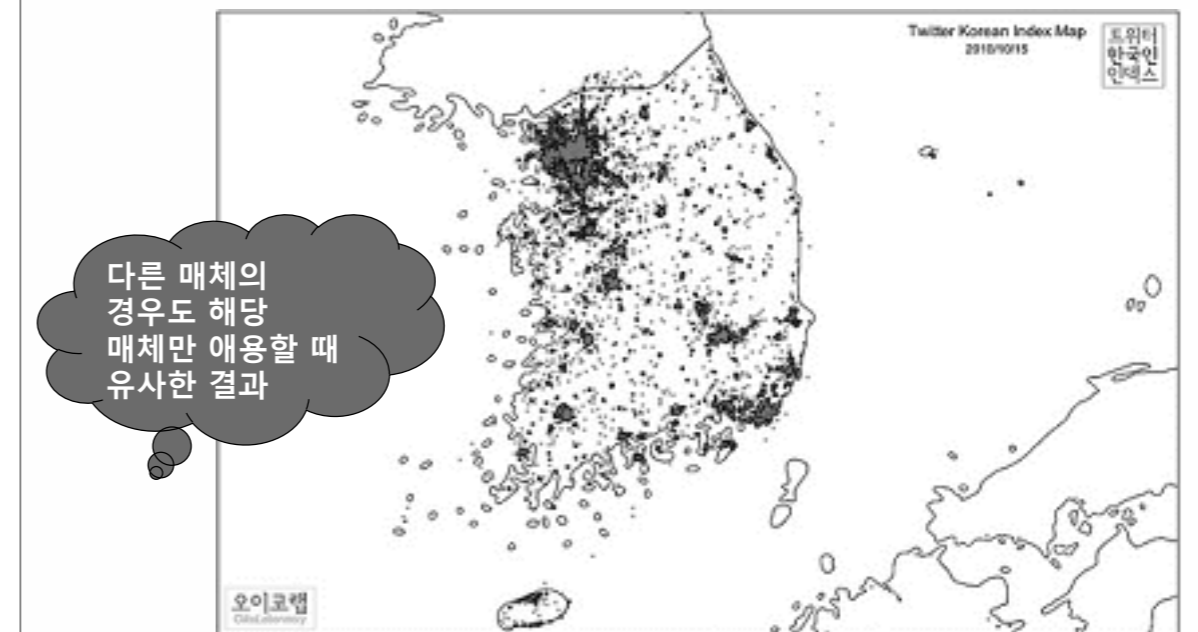


트위터 종이용자가 경이용자보다 현실-SNS 보수 비율 추정 차이 더 적음

출처: 나은영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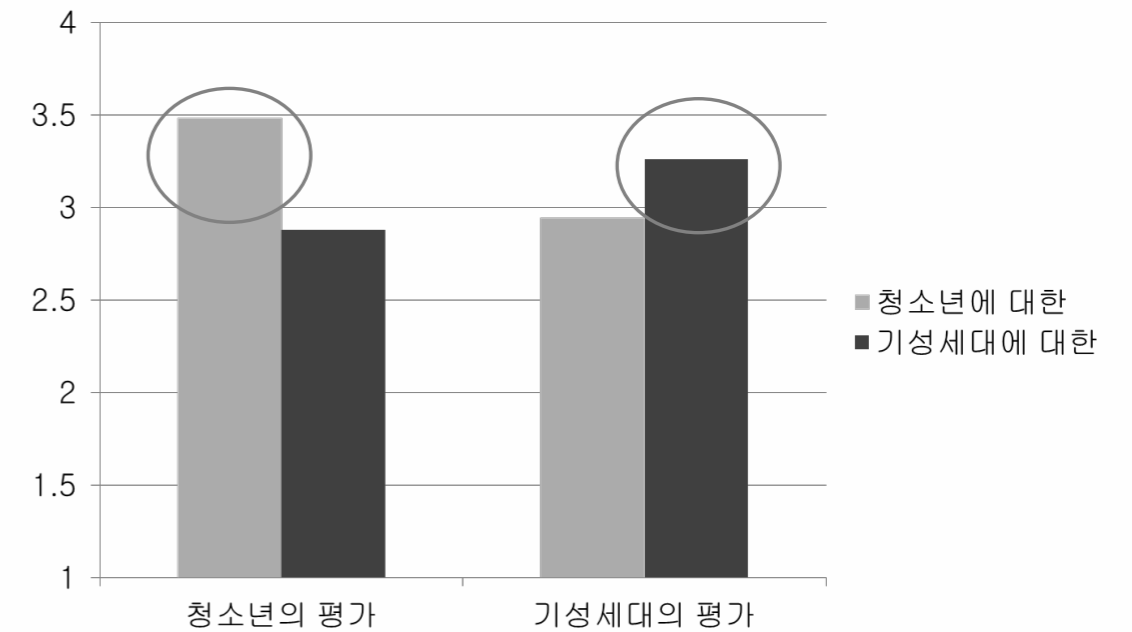
트위터 이용자 지도 (2010년 기준)



분노는 인지적 관점을 축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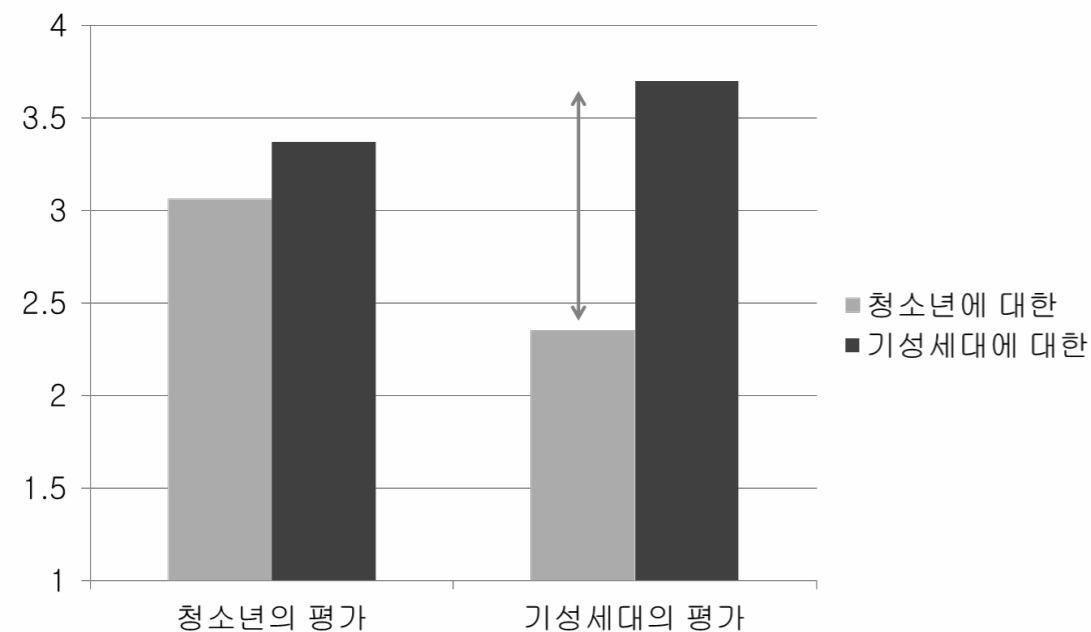
- 분노는 행동의 에너지는 되지만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못함.
- Anger가 Attentional Myopia 유발
 - 분노는 perspective를 narrowing시킴 (cognitive breadth를 감소시킴)
 - E. Harmon-Jones & P. A. Gable (2013. 8. 2. APA 발표)
- 역으로, cognitive scope를 넓히면 anger를 감소시킬 가능성 있음
 - 정보 선택성으로 좁은 범위만 보는 시각 넓혀야

‘상황에 따른 융통성’ 평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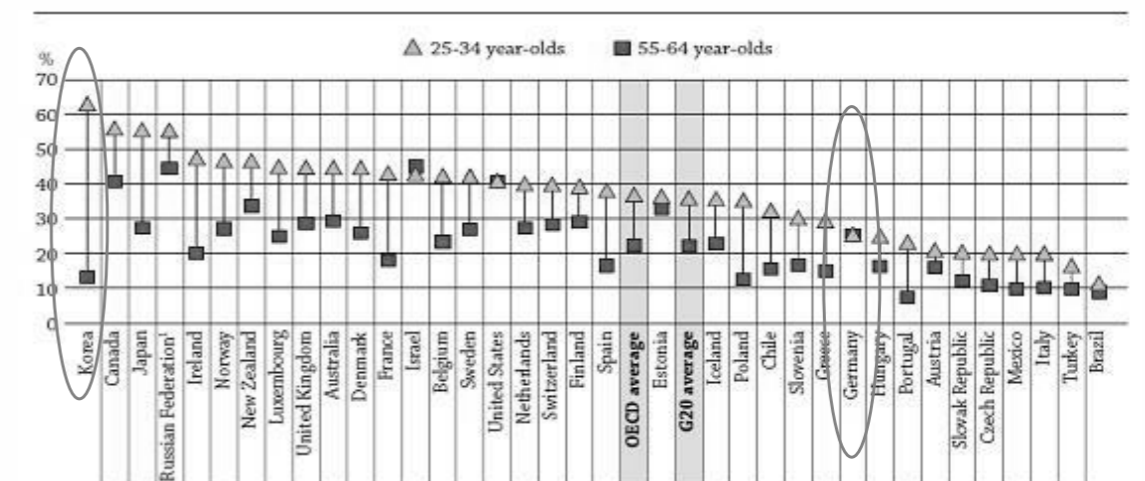
출처: 정보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구보고 2006-09)

‘합리적 판단력’ 평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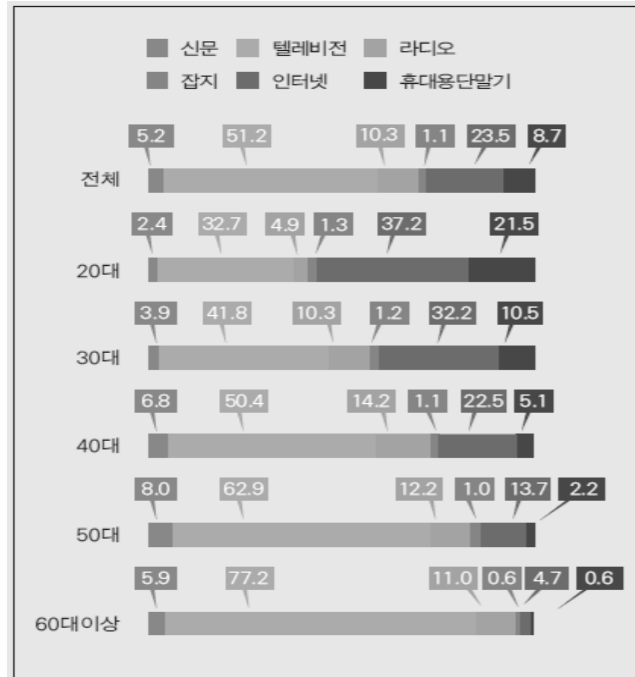
출처: 정보화로 인한 세대 간 갈등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연구보고 2006-09)

대학졸업자 비율 세대차 OECD 1위



1. Year of reference 2002.
Countries are ranked in descending order of the percentage of 25-34 year-olds who have attained tertiary education.
Source: OECD, Table A1.3a. See Annex 3 for notes (www.oecd.org/edu/eag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459831>

세대별 미디어 이용시간 점유율 차이



출처: 김위근 · 오수정 (2012)

- 소통 수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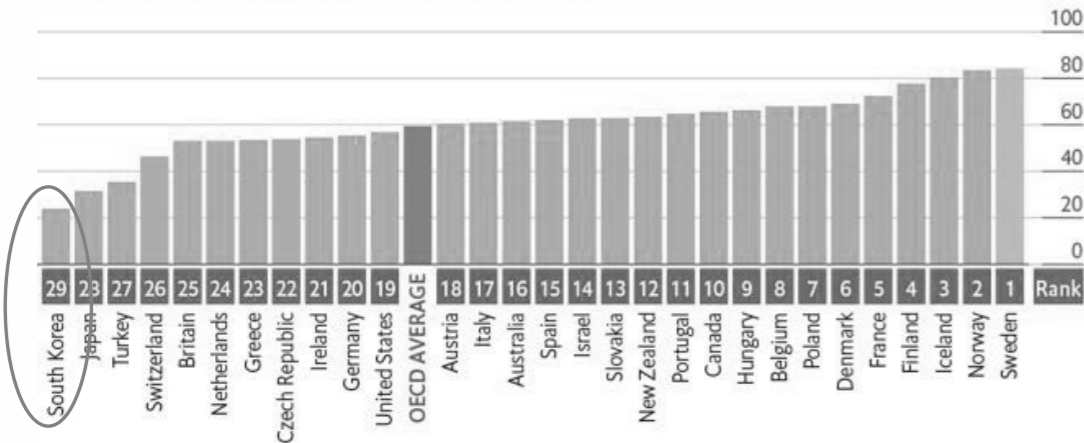
3. 의견 양극화를 줄이려면?

SOGANG UNIVERSITY

유리천장 지수: 성별 권력 비대칭

Glass-ceiling index

Environment for working women, 2017 or latest, 100=best



Sources: Europ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Eurostat; GMAC; ILO; Inter-Parliamentary Union; OECD; national sources; The Economist

- 여성 관리직 비율과 남녀 소득격차 포함한 10문항 측정

미디어의 균형적 이용과 정돈된 언어

- 현재 양분되어 있는 미디어를 골고루 이용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의도적으로 진보-보수 언론들을 골고루 접하도록 하면서, 상대 진영의 논리를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해하고, 막말이나 극단적 언어가 아닌 '정돈된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야 함.
-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준이 훨씬 더 높음 (옥석을 가려낼 줄 안다는 뜻).

[제안은 쉬우나 실천은 어려운] 대안

미디어교육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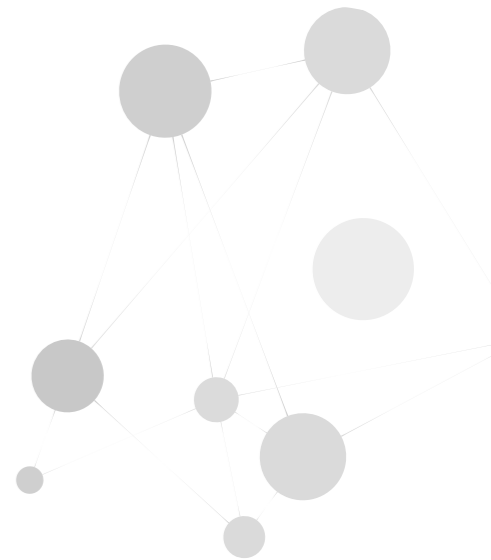
- 오해와 착시에서 벗어나기
 - 다른 사람(들)의 의견 넘겨짚지 않기 (선불리 단정하지 않기)
-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 동질적 의견에 둘러싸여 있지 않은지 점검 필요
- 집단의 시각에 비추어 과장 해석하지 않기
 - 언론의 사회통합 기능 필요
- 미디어의 균형적 이용
 - 본인이 많이 이용하는 미디어의 내용을 현실과 동일시하지 않기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2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이론과 실제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이론과 실제-

2018.3.29.(목)

정 필 운
한국교원대학교



INDEX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I. 문제의 제기

II.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이론

III.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특수 이론

IV. 결론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I. 문제의 제기

온라인 여론 공간의 확장



온라인 여론 공간의 확장

- 출처: 류동현, 해외 미디어 보고서 들춰보기, 월간 신문과방송 2016.12, 인터넷 기사글(<http://yudonghyup.com/the-political-environment-on-social-media/>)
- 그림은 류정희의 작품

3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I. 문제의 제기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노력

- 가짜뉴스의 범람
 - 김관영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7.4.11.
 - 주호영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7.4.25.
 - 안호영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7.5.30.
 - 이은권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7.7.26.
 - 송희경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7.8.4.
 - 이장우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7.9.1.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행위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 명예훼손, 모욕 등 악성 댓글
 - 장재원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7.12.28. 게시판 댓글 작성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 온라인 투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
 - 윤한홍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017.2.15.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주는 행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5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I. 문제의 제기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 문제

- 넘치는 정치 담론에 대한 피곤함
- 중간지대가 없는 언론의 양극화
- 명예훼손, 모욕 등 악성 댓글
- 가짜뉴스의 범람
- 온라인 투표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여론 왜곡 등

4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II.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이론

1.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이란 구두에 의한 표현을 말하고, 출판이란 문자 또는 형상에 의한 표현을 말한다. 고전적 의미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그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가 무엇인지는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언론·출판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 외에도 알 권리, 보도의 자유, 권리구제형 언론매체이용권(정정보도청구권 등)까지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 언론·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이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형성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권

6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I.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이론

2.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과 방법

-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 보면 공익이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반적인 법률유보 규정)
-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와 검열의 절대 금지)

7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I.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이론

2.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과 방법

-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와 검열의 절대 금지)
 - 헌법의 역사를 되돌아 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찾아내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전략
 - 사전제한 억제 원칙(이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구체화)
 - 여기서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 ✓ (예)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위헌(93헌가13),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위헌(2000헌가9)
 - 허가란 원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공익상 일반적·상대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공익목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지대상 행위를 해제하여 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해제 여부에 재량을 가진 경우
 - ✓ (예) 신문사 설립시 허가제 채택하면 위헌
 - 그 밖의 사전 제한(법원의 가처분 제도, 압수·수색제도, 정기간행물 등록제도 등)은 상대적 금지. 이것은 개별적 판단 필요

9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I.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이론

2.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과 방법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일반적인 법률유보 규정)
 -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하여야 하고(목적요건)
 -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이라는 법형식에 의하여야 하고(형식요건)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적합하고 제한받는 국민의 법익을 최소로 침해하며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방법요건-과잉금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8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I.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이론

2.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과 방법

- 표현의 자유 제한론 요약
 - 국가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의 필요상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우선 제일 침해가 적은 제1단계 사후제한으로 목적달성을 추구해 보고,
 - 그 제한방법만으로 도저히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2단계 허가나 검열 이외의 사전제한을 선택할 수 있다.
 -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단계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안된다. 허가나 검열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아래의 단계로 내려갈수록 심사는 엄격해진다.

10

III.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특수 이론

1.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수단을 통하여 해결가능한가?

출처: 로렌스 레식 저, 김정오역,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나남, 203쪽 참고

11

III.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특수 이론

1.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 로렌스 레식은 사이버공간에서 구조와 그 구조를 결정하는 기술에 주목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실공간에서는 법을 개정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기술적 요소인 코드(code)가 법 이상으로 강력하게 인간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
- 사이버공간에서 문제해결은 오로지 규범적 코드에 초점을 맞춘 채 이루어질 수 없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찾기 위해서는 규범적 코드와 구조 또는 구조를 결정하는 기술적 코드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규범적 코드가 작동
-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충되는 법익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면 이를 형량하여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작업

13

III.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특수 이론

1.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인터넷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수단을 통하여 해결가능한가?

출처: 로렌스 레식 저, 김정오역, 「코드: 사이버공간의 법이론」, 나남, 216쪽 참고

12

III.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특수 이론

2.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현실 공간과 다른가?

- 상반된 두 견해가 대립
 - 전통적으로는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은 개방성, 접근 용이성, 탈중앙통제성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현실공간보다 표현의 자유의 범위가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등에 비하여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므로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원래 현실공간에서 누려야 할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 상반된 견해도 있다.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으로 이용자가 무책임해지고, 전파 속도가 현실공간의 표현보다 매우 빠르고 파급력이 매우 크므로 사후규제만으로는 공익을 보호할 수 없으므로 더욱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14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II.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특수 이론

2.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현실 공간과 다른가?

- 원칙적으로 같다고 보되, 개별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타당
 - 필자는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여 왔다.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현실공간보다 더 크다는 주장은 1990년대 인터넷발달 초기에 기술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확대되도록 구조화되는데 반하여, 그에 대한 국가의 제한과 기술의 제한이 구조화되기 이전의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거나 희망 섞인 주장
 -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것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충되는 법익의 섬세한 균형이 무너지면 이를 형량하여 다시 균형을 잡아가는 작업이다. 다만, 이러한 원칙을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개별 서비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 (one-size-doesn't-fit-all). 인터넷은 단일한 의사표현의 매체가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인 평등에 부합하는 논리

15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V. 결론

지금까지 논의의 결론

1. 인터넷에서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
2.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공감
3. 제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제한의 일반 이론에 충실하여야
4.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이 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5. 인터넷에서 표현은 현실공간과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야
6. 인터넷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매체이며, 다양한 서비스에는 각각 다른 법적 규율 필요하며, 같은 범주의 서비스도 다른 구현 가능성 존중
7. 당해 사회문제 해결 위한 인터넷 규제가 미치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17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II. 인터넷 표현의 자유의 특수 이론

3. 무엇이 인터넷 산업을 발전시키나?

-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과 다른 산업과 융합을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등의 산업진흥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 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여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노력
- 적극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결함을 치유하여야
 - 국내 정보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그와 같은 산업진흥법이 아직 부족해서가 아니라 혁신을 가로 막는 제도적 결함에 있다.
 - 그 중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사업자와 구글, 페이스북같은 국외 사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역차별'이라고 불리는 이 문제는 국내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전적인 문제 중 하나
 - 사이버공간에서는 반드시 규제의 집행 결과를 고려한 입법 필요

16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V. 결론

보론: 제 주장에 따라 장제원 의원 발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평가

1. 내용
 - 1) 본인확인조치 주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 등'으로 줄이기도 함)에서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확장
 - 2) 이들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 이용자가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함
 -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18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V. 결론

☞ 토론: 제 주장에 따라 장제원 의원 발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평가

2. 비판적 분석

- 1)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댓글을 달고자 하는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제한
- 2) 인터넷 본인확인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음
 - 우선 명예훼손, 모욕 등 악성 댓글로 인한 인격권 침해는 있음
 - 그런데 2012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헌재 2012.8.3. 2010헌마47, 252(병합))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익명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 및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무너진 상황인지 의문
 -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연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본인확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네이버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비슷한 수준의 본인 확인을 하고 있음

19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V. 결론

☞ 토론: 제 주장에 따라 장제원 의원 발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평가

2. 비판적 분석

- 2) 수사기관은 물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용자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있는 기술적 구조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필자는 의문
-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 3)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인격권 침해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


21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V. 결론

☞ 토론: 제 주장에 따라 장제원 의원 발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평가

| 네이버 본인인증 |



NAVER

로그인

수용 댓글 로그인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

브이디 >

맥이스북 >

로그인하기

〈그림 1〉 네이버의 회원가입절차

〈그림 2〉 네이버의 댓글 본인 인증절차

20

온라인
여론 공간의
규제
...

IV. 결론

☞ 토론: 제 주장에 따라 장제원 의원 발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평가

2. 비판적 분석

- 4) 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댓글을 달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본인확인을 하지 아니하면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없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 세부 논증은 발표에서
- 5)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려움
 - 세부 논증은 발표에서

3. 결론

- 이 법안에서 제안된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인터넷 본인확인제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덜하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음

22

감사합니다!

정 필 운

pwjung@knue.ac.kr